

오피니언

월/요/광/장

구길선



얼마 전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이혼 관련 한 판결기사가 주목을 끌었다. 2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구박받아온 부인이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다.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아울러 부부 재산의 40%를 부인에게 분할해줄 것을 남편에게 명했다.

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이른바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

잘못한 자는 이혼할 수 없나

여기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잘못한 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화두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상 이혼은 문자 그대로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것으로 관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성립된다. 재판상 이혼에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학대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를 예시하면서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다.

서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관례에 등장하는 다음의 확정된 사례를 보자. A녀와 B남은 196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70년 5월 장남을 출산한 후 1974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1980년 12월 차남을 출산했다. 남편은 1976년부터 병원을 개업해 경영하는 등 무난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부인은 출을 추러 다니면서 가정용 소홀히 했고 몇 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했다가 20여일 만에 귀가하기를 반복했다. 집이나 병원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전화도 잦았다. 부인을 찾는 전화였다. 급기야 부인은 1990년 3월경 2억여원이 예금돼 있는 통장을 갖고 다시 가출해 돈을 모두 인출했다. 1990년 5월 어느 날 밤에는 가출한 부인이 주점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다음날 밤 부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집을 빠져나가려고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남편은 1990년 9월 부인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해 부인이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을 엄벌해 주도록 법원에 탄원했다. 부인은 1993년 법원에 이혼청구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으나 부인이 다른 사람과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미 실질을 잃어버리고 겉데기만 남은 혼인을 법의 강제에 의해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혼인의 윤리성에 반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혼인을 파탄에 빠뜨린 유책 배우자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 무책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출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미국 등 서구 제국의 현대 이혼법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

이는 추세다. 물론 이혼을 금기시키는 전통윤리가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입장에서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관 내지 혼인관도 예전에 비해 서구화된 면이 많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의 예외사유를 더욱 넓힐 시기가 됐다고 본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를 더욱 현실화해 반대 배우자의 보호에도 충실해야 한다. <변호사>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유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특채 비리' 어디 외통부만의 일인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과문과 관련해 사퇴했다. 대한민국 외교를 총괄하는 수장이 딸을,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는 부처에 '나 홀로 특채'한 사실이 특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심히 부적절했다. 더욱이 자녀들이 취업을 못해 고통받고 있는 일반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 장관 딸의 특채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탈·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의법조치해야 한다. 또한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밝혀진 외교고시 2부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신분사회인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음서제도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개탄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유 장관 딸의 특채 경우로 국정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통부의 특채 논란을 공직사회에 특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채비리가 외통부만의 일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중앙부처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특채과정은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공직사회는 단체장과의 인연과 돈에 의한 특채와 인사가 만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중도에 낙마한 단체장의 대부분이 인사비리에 연루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의 특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직사회의 선진화는 공염불에 그친다. 특별채용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 제한적 경쟁을 통해 사람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절대적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0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조건들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이자 현대미술 축제인 2010 광주비엔날레가 사흘 전 개막됐다. 오는 11월 7일까지 66일간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31개국 134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개막식에서 국내외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개념적이고 어렵다는 현대미술의 편견을 갠 기획이 돋보인다"며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광주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 관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진과 영상 분야에 치중돼 다소 지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높은 관심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광주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권에서만 부산을 비롯 상하이, 시드

니비엔날레 등 7개의 미술행사가 열려 국제적 시각이 분산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9월11일~11월 27일)과 상하이비엔날레(10월24일~내년 2월28일)만이 개최되고, 광주가 가장 먼저 개막한 만큼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번 대회에 달려 있다. 그 성공 여부는 전시장 관리 등 관람객 편의와 외국인들을 비롯한 관람객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전시 중에 작품이 망가지고 동원된 학생들이 떠들거나 작품을 훼손했던 사실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전시장 안 해외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및 교통 편의 등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청결 및 친절할 서비스는 물론이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윤상도



탈무드에 술과 관련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을 때 악마가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노아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포도나무인데 아주 달콤한 열매가 열리니, 익은 다음 그 즙을 마시면 매우 행복해지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자기도 거들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양과 사자, 원숭이, 돼지를 끌고 와 그것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그 결과 인간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갈이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더 많이 마시면 돼진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 부르며, 나중에는 토하고 똥고하고 하여 돼지처럼 추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를 잡았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양'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폭력사범이다. 영장심사 법정에서 폭력사범 중 약 절반가량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말하자면 '사자 단계'에서 사고를 친 셈인데, 곤란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좀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하여 '사자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 공무원행방배 사범이 있다. 사실 이 경우는 거의 100% 술과 관련이 있는데, 상습적인 사람들은 취하기만 하면 죄 없는 경찰관 먹살을 잡고 웃을 벗기겠다는 허세를 부리거나

술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상

필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범죄 혐의자)를 심문하여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이 필요하다는 1차 판단을 받은 사건이 나 만큼 사안은 대체로 중하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호소하는 변명을 듣고 있노라니 속된 말로 '술이 원수'라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약 5개월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331건을 분석해 보니, 음주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거나 피의자의 범행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비율이 26% (85건)나 되었다. 우선 음주 그 자체가 범죄와 직결되는 음주운전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5만1696명, 음주운전 적발자는 32만7606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사고로 중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등이 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본인으로서서는 별로 취한 느낌이 들지 않아 운전

('원숭이 단계') 경찰서를 이리저리 휘저으며('돼지 단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다음 날 인간세계로 돌아와 후회로 가슴을 치지만, 한 번 얻질려진 돌이 담아질리 만무하다. 필자는 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이며(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든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술을 빼고는 인류 역사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평한 긴장감 속에 진행한 재판을 모두 마친 다음 시원하게 들이키는 한 잔의 맥주는 그 어느 감로수에 비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술처럼 잘 적용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앞서 예기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26%가 술과 관련 있다는 말을 새겨 보면 술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중범죄의 26%를 막을 수 있다는 셈이 된다. 인생(人生)을 즐기기 위해 마시는 술인데, 그로 인해 축생(畜生) 취급을 받아야 되겠는가.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 사회를 위해 절제된 음주습관을 길러 어디까지나 '인격'을 지킬 일이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기고

송명근



7월 취업자 수는 243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증가했다.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02년 3월(86만7000명) 이후 최대인 65만 8000명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2331만3000명)를 기록하면서 전체 취업자의 95.9%에 육박했다. 반면 7월 실업자 수는 9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92만8000명)과 유사하고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높아야 한다. 또 기술개발 및 경제적 기반을 확충을 위한 산학 협력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선별과 집중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추진, 상업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 수단 마련 등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산·학·관 협력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산학협동으로 개발·생산된

청년실업 대안은 산학관 협력체제에 있다

청년 실업률은 8.5%로 여전히 높다. 청년실업 해소 대안은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에 있다. BK21, NURI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 및 녹색성장 지원 사업 등이 산·학·관 협력 사례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설계와 각종 법령 정비 등 정책조정 차로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 협력을 이끌고 안정화한 전문 조직의 설립도 요구된다. 대학 및 기업의 CEO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산학협력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 산학 협력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은 80%를 웃돈다. 경제발전의 비법목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성장동력 강화를 통해 경제를 혁신주도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확

고품질의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연간 4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 다각적으로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순수물자 조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구매비중이 금액기준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우수제품 인증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인증·보증해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 제품을 신제품으로 즉시 교환해 준다. 또 각종 입찰에서 평가시 기술개발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기술개발정책을 지·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으로 해당 기업은 초기에 공공시장의 판로 개척을 하고, 이를 발판으로 기업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다. 또 기업의 발전은 구인도 이어져 청년실업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나랏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광주지방조달청 정보구매팀 계장>

재래시장내 '도깨비약'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몇 일전 한 가게에 갔더니 흔하게 볼 수 없는 비타민제가 거실에 놓여져 있었다. 집 주인의 말로는 시장에서 구입한 미제 비타민제인데 유명하더라며 모르냐고 되물었다. 그분은 비타민제 아니라 위궤약 약도 보여주면서, 자기는 일일이 처방이 필요한 병원에 안가고 시장에서 사다 먹는다고 말했다. 물론 모두 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는 전문 의약품들이었다. 약이라는 것은 질환에 알맞은 양만 먹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로 사다가 함부로 복용할 경우 자칫 목숨도 잃

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분 말씀으로는 시장에 가면 이런 도깨비 의약품들을 맘대로 살수 있다고 하니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 또한 부지각수로 많을 듯하다. 재래시장에서 전문의약품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듯하며 특히나 이처럼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약품들은 정상제품이 아닌 필수품이거나 아예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불법의약품은 팔지도 말아야겠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의사 처방없이 판매로 사먹지 말자.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율목동>

無等鼓

춘추시대 인적이 드문 험한 산중에 지나던 공자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제자를 시켜 그 사정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에 이어 하나뿐인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산중에 떠나지 않는냐는 물음에 여인은 "이 곳에 살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말이 나오게 된 일화다. 조선시대 민중들이 이 고사(故事)를 가장 실감했던 때는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했던 19세기였을 것이다. 실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양을 8·15 경축사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하자며 제안한 '통일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인 복지정책 위원 마린을 명분으로 제기한 '부유세'가 그것이다. 취지는 모두 그렇듯해 보이지만 납세자인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 과제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세금 신설



Table with 2 columns: 광우일보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